

기력회복에 좋은 오리주물럭 레시피

오리주물럭의 주재료인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다른 육류보다 유해한 기름이 적다. 체내의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필수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을 많이 함유해 성장발달과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재료다. 오리고기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가 기름이 올라 맛이 좋다. 오리고기와 잘 어울리는 야채는 파, 미나리 등이 있다.

♪ 오리고기 고르는 법 및 손질법



▲다른 육류보다 기름이 적은 오리고기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좋은 오리고기 고르는 법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좋은 오리고기를 고르기 위해서는 색은 선홍색에 가깝고 탄력이 있는 육질을 가진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오리고기는 반드시 밀봉해서 보관해야 한다. 오리고기를 손질할 때는 털을 다 벗긴 후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찬물로 깨끗이 씻는다. 오리고기는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된다. 오리고기를 이용한 요리는 오리양념볶음, 오리주물럭, 오리백숙 등이 있다.



♪ 오리주물럭 레시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리고기주물럭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재료

오리고기, 감자, 양파, 대파, 당근, 팽이버섯, 부추

양념 재료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물엿, 청주, 다진마늘, 후추

- 1 오리주물럭의 양념재료를 이용해 오리주물럭 양념을 만들어준다.
- 2 오리를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손질해준다.
- 3 감자, 양파, 대파, 당근, 팽이버섯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준다.
- 4 양념과 오리고기, 채소를 섞어준다.
- 5 달군 프라이팬에 양념과 오리고기, 채소를 볶아준다.

▶ 메디컬리포트 [2018. 12. 3]

13,000원에 오리구이부터 닭갈비까지...다양한 메뉴 '푸짐'



12월 6일 방송된 KBS2 2TV 생생정보의 '가격파괴 Why' 코너에서는 1인 13,000원 국내산 오리구이 무한리필 집을 찾았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 무한리필집은 1인 13,000원에 국내산 생오리를 비롯해 오리 양념주물럭, 오리 간장주물럭, 오리훈제, 독일산 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돼지양념 불고기, 닭갈비 등 다양한 메뉴를 함께 먹을 수 있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이 가격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 좋다", "고기가 부드럽고 잡내도 없다"고 극찬했다.

▶ 한국일보 [2018. 12. 6]

“가축 전염병, 이기는 방법 찾아가고 있다”

축산 농가에 겨울은 두려운 계절이다. 가축전염병 공포 때문이다. 겨울이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고 바이러스 매개 역할을 하는 철새도 많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선포하고 방역 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전국의 가축전염병 상황을 살피고 있다. 그 중심에서 방역 정책을 이끄는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 방역상황실 찾아 칭찬 = 올해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문자 오 국장은 “전염병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다. 허풍이 아니다. 전염병으로 농가가 시름을 앓던 여느 겨울과 달리 올겨울엔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구제역과 AI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오 국장과 방역정책국은 지난해에도 가축전염병 발병 건수를 예년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오 국장은 올해 방역 대책이 성공을 거둔 요인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부터 가축전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이동제한 조치(스탠드스틸)를 내리고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끝내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스탠드스틸이나 살처분 같은 조치가 늦어지다 보니 그 사이 전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가는 일이 많았다. 오 국장은 “지난해 방역정책국 설치도 방역 강화에 역할을 했다”며 “방역정책국이 생기면서 지자체의 방역 실무 조직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방역 정책 컨트롤타워로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오 국장에게 첫 사령탑을 맡겼다. 농식품부와 방역정책국이 일군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방역 상황실을 찾아 “중국, 러시아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농식품부가 특별히 수고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요원들을 격려했다. 오 국장은 “격려는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잘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웃었다.

“2010년 구제역 골든타임 놓쳤다” = 오 국장에게 아픈 기억은 구제역이 극성을 부렸던 2010년 겨울이다. 전국에서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오 국장은 당시에도 방역 정책을 맡았다. 그는 “처음에 구제역을 오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첫 발병 이후 대응을 하는 데 1주일이 걸렸다”고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2010년의 실패는 정부가 방역 정책을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국장은 “그때 이후 축산 차량의 GPS 장착도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농가를 오가는 차량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구제역이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퍼졌다. 그는 “축산 차량 이동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질병 통제도 쉬워졌다”고 말했다.

‘오리 사육제한’ 반대 목소리 줄어 = 오 국장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역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어렵다”고 털어놨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 농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살처분 강화가 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해관계를 전부 고려하면 방역을 하면 안 되고 방역만 하면 농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방역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다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방역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게 오 국장의 지론이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 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질병에 의한 손실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며 “누군들 싫은 소리 하는 게 좋겠냐. 방역은 축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다. 과도하게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방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 국장과 방역정책국이 도입한 지난해 ‘오리 사육제한(겨울 동안 전염병 취약 농가의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 역시 처음에는 농가나 계열화 사업자(가축 사육,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반대가 컸지만 지금은 ‘A 예방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국장은 “지금은 농가에서 오리 사육제한에 대한 반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방역 인력 뽑아도 일 터지면 떠난다” = 오 국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방역 인력 확보다. 가축방역관 등 공공 방역 인력 확보율은 70%대에 불과하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없으면 전염병 예방이나 초기 대응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어렵다. 문제는 방역 작업이 고된 데 비해 처우가 열악해 인재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방역 업무가 많은 농촌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하다. 오 국장은 “일이 없고 반려동물 중심인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일이 많은 농촌에서는 사람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며 “있던 사람도 큰일이 터지면 떠난다”고 걱정했다.

오 국장과 농식품부는 방역 일손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원을 늘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급여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 덕에 일손이 지난해보다 270명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첫 직급을 현재 7급에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 국장은 “행정안전부와 수의직 공무원 6급 채용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채용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농가·시민, 각자 위치에서 최선 다해 달라” = 오 국장은 “농가와 시민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수칙은 마련돼 있고 농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본분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일반 시민에게도 “철새도래지 방문은 자제하고 방역을 위한 소독이 불편하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순민 국장은 국가 수석수의관(CVO)을 함께 맡고 있는 방역 정책 전문가다. 구제역, AI 대응은 물론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 수습까지 이끌었다. 한때 수의사로 일했던 오 국장은 방역 행정과 현장 대응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엔 구제역 확산 방지에 힘쓴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1990년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농식품부 검역검사과장, 방역총괄과장, 방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전북 김제시 출생으로 전라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다.

▶ 이투데이 [2018. 12. 20]

4

이마트, 중국산 오리훈제 12월 말까지 철수한다



지난 11월 말부터 중국산 오리고기(전취덕 북경오리)를 수입·판매해오던 이마트는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의 요구에 따라 현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에서 취급 중인 해당 제품을 12월 말까지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오리협회는 12월 3일 성명서를 발표, AI 예방을 위해 전국 203개 오리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

기업 이마트가 AI 상시발생국인 중국산 오리고기를 수입·판매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한 갑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집회 등 강경대응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후 12월 11일 김만섭 회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이마트 본사를 향의 방문 협상 결과 이마트로부터 해당 제품을 12월 내 정리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는 국내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려 향후 오리농가와 상생 및 재발 방지 대책,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 이코노미톡뉴스 [2018. 12. 12]

“오리업계 요청사항 적극 검토할 것” 이개호 장관, 오리협회-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리산업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오리업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소속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은 지난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한 '시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 결기대회'를 시작으로 11일 동안 단식 농성 벌였다. 이때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오리업계와 간담회를 추진, 오리산업의 현안에 대해 논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지난 12월 10일 농식품부 장관실에서 오리협회를 비롯한 오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리업계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리협회는 오리업계의 뜻을 모아 ▲농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진흥을 고려한 방역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개편을 통해 농가가 사육에만 전념토록 중장기 특별 지원사업 전개 ▲계열화가 97%이상 진행된 오리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육 제한으로 피해를 본 계열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오리 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사료로 활용 등)을 위한 랜더링시설 지원 ▲지난 9월에 있었던 농성의 결과로 농식품부가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축산신문 [2018. 12. 12]

전남도, 시 차단방역 ‘올인’...도 간부들이 나선다



전라남도는 과장급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행정지원담당관' 22명이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생석회 살포 현황 등 방역현장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점검에 나서 시·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들 간부는 우선 시군을 방문해 단체장 등 간부들과 면담을 거쳐 시·군 차단방역 활동을 독려하며,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조치사항, 농가별 전담공무원 운영 적정 여부, 오는 26일 농장 주변 생석회 일제살포 계획 수립 여부, 방역 홍보 사항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시군에 생석회 구매비로 재난관리기금 3억 원, 예비비로 씨오리 농장 방역초소 설치비 2억 원, 닭·오리농가 면역증강제 구매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 노컷뉴스 [2018. 12. 18]

닭·오리 사육량 많은데…매년 찾아오는 ‘시공포’ 대책없나



최근 강진에 이어 순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원이 잇따라 검출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행히 모두 저병원성 시로 확진됐다.

전남지역은 오리 사육량이 많은데다 지난해 시가 잇따라 발생한 위험지역이라는 점에서 걱정을 깊게 한다. 전남도는 조류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고병원성 시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시 차단을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병원성 154건 발생

전남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닭·오리 사육량이 많은데다 지난해 시가 잇따라 발생한 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가금 사육 현황에 따르면 닭 사육은 2,276만6,000마리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오리 사육은 518만7,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9%를 차지한다.

전남에서 최근 5년 간 시 발생건수는 15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개 시·군에 68건(오리 62, 닭6), 2015년 5개 시·군 39건(오리39), 2016년 7개 시·군 17건(오리15, 닭2), 2017년 8개 시·군 25건(오리25), 올해 4개 시·군 5건(오리5)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살처분한 닭과 오리는 347농가 673만여 마리에 달하고, 피해액도 1584억 원에 이른다.

차단방역 미비가 확산 주요인

현재까지 시 전파의 주범으로는 철새로 꼽히지만 차단방역 미비가 시 확산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9일 나주 혁신도시 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열린 '시 대응 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시 발생 농가의 83.5%는 차단방역 미비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이 방역연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전남지역 A 발생 농가 농장 내 유입 경로 분석 결과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발생은 전체 163건 중 22건으로 13.5%에 불과했다. 나머지 83.5%(136건)는 차량이나 인근 전파, 축주나 종사자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45건(33.1%), 인근 전파 34건(24.2%), 축주/종사자 33건(24.2%), 가축이동과 농장 외부인원에 의한 전파는 각각 12건(8.8%)이었다. 차단 방역 상 문제점으로는 '차량·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미흡'이 27.6%로 가장 높고 축주·종사자에 대한 차단방역 미흡은 20.9%로 뒤를 이었다. 농장이 철새도래지 주변에 있어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비율은 20.2%, 가축이동시 감염 여부 확인 부족이나 야생조류에 대한 통제 대책 미흡은 각각 7.4%였다.

사육농가의 조기신고가 중요

전문가들은 A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육농가의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숙현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팀장은 "철저한 차단과 A 조기 종식을 위해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며 "오리가 녹색분변을 한다거나 폐사가 늘어나는 등 임상 증상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졌을 때 바로 신고만 하면 전문가들이 바로 가서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조치 확대와 축주나 종사자에 대한 방역 강화도 제시됐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는 처음 철새로 농장에 전파되지만 차량과 축주, 종사자 등에 의한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차단 방역 조치 확대와 축주나 종사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 내 A는 왕겨살포 장비 사용과정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가설건축물 축사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도 대안으로 나왔다.

전남도, A 방역초소 설치 등 방역강화

전남도는 A 차단 방역에 더 힘을 쏟기로 했다. A 발생 우려가 높은 종오리 농장 17개소에 2018년 10일부터 2019년 1월까지 방역초소를 설치해 운영기로 했다.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소독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군에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오리 농가 주변에 생석회를 뿌려 A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로 했다. 도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지원해 지난 10월부터 2회에 걸쳐 생석회를 일제 살포했으며, 12일 3차 일제 살포에 나선다.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영암호, 고천암 주변 도로 등에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소독을 한다. 또 철새 도래지에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철새 예찰 감시요원 33명을 채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 “닭·오리 시 감염위험 고조…차단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위험이 커졌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닭·오리 등 가금농가에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32차례 검출됐고 대부분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으나 아직 1건은 정밀조사 중이다.

특히 12월과 1월은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 기간이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기간인데다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빈도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중순 현재 국내에 약 76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겨울 철새 이동 경로인 중국·러시아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6년 16건, 2017년 66건에서 올해는 95건으로 대폭 늘었다.

실제 2017년 가금 농가에 첫 고병원성 AI 발생은 한 달 남짓 빠른 11월 17일이었다. 감염 횟수 역시 12월과 1월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2010~2018년 가금농가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 925건 중 47%인 436건이 이때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환경부와 함께 야생조류 분변 AI 바이러스 항원 검사 건수를 지난해 9,799건(10~12월)에서 올해 1만1,350건으로 늘리고 최근 AI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큰 가금농가 1,915곳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소속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산 거점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소독 횟수도 늘렸다. 특히 인근에 AI 발생 전력이 있거나 자체방역 평가가 미흡한 오리 농가 203곳, 약 300만 마리에 대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13일에는 전국 가금 계열화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민간 부문의 협조를 당부한다.

오순민 국장은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될 땐 즉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베테랑을 현장에 투입해 살처분 등 초동방역을 총괄할 계획”이라며 “농장주도 매일 내·외부를 소독하고 의심 증상 발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닭·오리 계열화사업자 40%만 '방역관리 우수'

■ 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 점검·평가 결과

(단위: 개소수, %)

축종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합계
닭	5 (9.8)	21 (41.2)	21 (41.2)	3 (5.8)	1 (2.0)	51
오리	-	4 (20.0)	16 (80.0)	-	-	20
합계	5 (7.0)	25 (35.2)	37 (52.1)	3 (4.2)	1 (1.5)	71

전국의 닭·오리 등 계열화사업자 71개소 중 42%인 30개 사업자만이 방역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41개사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

다. 특히 방역관리가 미흡한 4개소는 2019년도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3개월간 전국의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개소(닭 51개·오리 20개)와 함께 도축장 29개소(닭 20개·오리 9개)와 계약농가 304호(닭 232호·오리 72호)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점검·평가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방역프로그램' 수립과 이행실태, 소속 도축장과 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5단계 등급(가~마)으로 구분했다. 가등급이 '매우 우수', 나등급 '우수', 다등급 '보통', 라등급 '미흡', 마등급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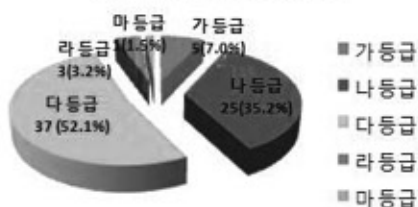
평가등급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계열화사업자 71개소 중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등급은 30개소,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는 41개소다.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가'등급은 5개소, '나'등급 21개소, '다'등급 21개소, '라'등급 3개소, '마'등급 1개소로 평가됐다.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가'등급과 '라·마'등급은 없고, '나'등급 4개소, '다'등급 16개소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닭 계열화사업자는 계열사 본사 2개소와 도축장 3개소, 계약농가 82호, 오리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 12호에서 방역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계약농가가 10호 미만인 소규모 계열사의 경우 자체 방역프로그램이 없거나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적 통지 여부, 도축장은 소독약 유효기간과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 지적됐다. 계약농가는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과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비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경비와 같은 정책자금과 금리 등을 지원할 때 '가·나' 등급 계열화사업자는 금리 0%로 우선하고, '다' 등급은 금리 1%, '라·마' 등급은 제외할 방침이다.

▶ 산아일보 [2018. 12. 9]

■ 계열화사업자 평가 결과(71개소)



■ 축종별 평가등급 비율(%)

